

일 하라고 재개발 조합장 뽑아줬더니...

뒷돈 거래·조합비 배임 의혹... 결국 경찰 수사

광주 남구 서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고소장 접수 여직원 CCTV 감시 등 업무 갑질·사생활 침해 주장도

광주지역 한 도시개발조합 조합장에 대한 토지 매입 시 뒷돈 거래와 조합 운영비 사적 사용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그를 해임하기 위한 절차도 준비 중이다. 20일 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주 남구 서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 A씨에 대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했다. 조합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 선출된 A씨에 대한 비위가 나열돼 있다. 먼저 이들은 A씨가 아파트 건립 허가 조건인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 매매 당시 뒷돈 거래와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아파트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소유주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8월 맞은편 토지 소유자 B씨와 협상에 나섰고, 같은 해 11월 373.55㎡(113평)를 26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B씨는 매매 계약 후 한 달 뒤인 12월 전남 담양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나 현금으로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은 해당 토지 매입 당시 당사자 거래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조건 등의 약정을 했지만 이사회와 대의원의 승인 절차 없이 165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독단적으로 집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조합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도 저촉되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A씨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광산구 소재 중개업체는 해당 토지 거래 당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합원들은 A씨가 조합 재정,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조합이 파악 내용을 보면 한 골프장과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또 조합과 관련되지 않은 행사나 장소에 조합 카드를 이용해 회원을 보내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수십 건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조합 내 임원들이 감사에 나섰고, 해당 내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지만 A씨는 조합원들의 해명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반복된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결된 CCTV를 통해 여직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퇴근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사무실로 택시를 타고 오라는 등 사생활 침해와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해당 여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위해 나서야 하는 조합장이 오히려 조합원들의 고통은 뒷전에 두고 더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오는 25일 광주 남구 서동 향교에서 조합장 A씨에 대한 해임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SOCIETY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5:53 달맞이 01:53
맑음 19:10 달맞이 11:42



광주	☀️	14~26
목포	☀️	13~22
여수	☀️	12~18
순천	☀️	11~22
구례	☀️	11~26
광주	☁️	13~21
임도	☁️	10~26
진남	☁️	10~21
고흥	☀️	10~21
진도	☁️	12~20

목포	미물(고)	07:28 / 19:30
	셀물(저)	13:12 / --:--
여수	미물(고)	02:20 / 14:45
	셀물(저)	09:23 / 20:45

복어 먹고 중독 증세... 긴급 이송

만년필 ○전남 여수의 한 섬에서 복어를 섭취한 후 중독 증세를 보인 60대 3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20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33분 전남 여수 연도에서 60대 3명이 복어를 먹고 마비 증상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접수해.

해경은 연도항으로 경비함정을 급파.

도착 당시 환자들은 허마비, 근육 경직, 호흡 곤란 등 복어 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중 1명은 의식 저하와 호흡장애로 긴급 처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해경은 보건소 의료진과 환자 3명을 여수 일대 병원으로 이송해.

확인 결과 이들은 이날 오전 연도에 입도해 관광과 낚시를 하던 중 여수 소재 수산시장에서 구입한 복어를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진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19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년 빛고을관동회'에 참석한 신도들이 연등행진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일가족 살해범 구속... 광주 분양사기 수사 '속도'

동부경찰,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이씨 등 집중조사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이모씨가 광주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구속된 이씨를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이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A씨, 분양대행사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에 달리는 다량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용역사, 창립준비위원회,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대계약금으로 1인당 3000만원을 받은 뒤 환불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343세

대가 들어서는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이씨 등은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동의서를 확보하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명확한 반환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

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계약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씨와 A, B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씨는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존속 살해)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다"며 "분양사기 핵심 인물인 이씨가 구속된 만큼 수사는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

군 간부 사칭 '노쇼'... 자영업자 '피눈물'

신중 사기 잇따라... 가짜 명함·위조 공문 이용

#1. 지난 1일 한 생수업체에 자신을 군 간부라고 소개한 남성 A씨가 물품 구매 의사를 밝혔다. 며칠 뒤 남성은 "부대에 훈련이 있어 나갈 수 없는데 전투식량 대납을 해주면 물품을 받으러 가면서 돈은 돌려주겠다"고 했다.

앞서 얼굴 사진이 담긴 공무원증과 군부대 물품 공급 계약서까지 받았기에 업체는 이 말을 믿고 총 3회에 걸쳐 216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돈을 송금한 후 군 간부는 남성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

#2. 지난 11일 한 도시락 전문업체는 해군 간부 B씨로부터 80인분의 도시락을 주문받았다. 그러면서 군부대 직인이 찍힌 '부대 물품 공급 결재확인서', '구매 요청서'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이후 B씨는 전투부식업체 명함을 보내면서 "군대라 업체가 가격을 자주 올린다. 첫 주문은 저렴하니 420만원을 대신 결제해 주면 도시락 결제 시 함께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업체 관계자가 명함에 적힌 부식업체 주소지를 확인했고, 실체가 없음을 드러내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전국에서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연락을 끊는 '노쇼(No Show)'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군 간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대량·단체 주문을 발주하거나 전투식량·식자재 대리구매를 방자해 현금을 송

금하게 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광주·전남 경찰청이 접수한 피해 신고 건수는 총 37건(광주 28건·전남 9건)이다.

피해액도 업체별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사칭의 대상이 군인에 한 정대 있지 않고 교도관을 사칭하거나, 범행 행태도 물품 구입비 대납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는 등 다양하다.

사기범들은 위조된 신분증, 공문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대량 주문을 하는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광주경찰청은 서부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사건을 병합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윤재상 서부경찰 수사과장은 "최근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신중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량 주문이 접수되면 반드시 예약금을 설정하고 소속과 공식 전화 번호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서부경찰이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만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수법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며, 만약 자영업자가 속아 돈을 보내게 되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